

# 대전광역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8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7. 7. 9.

발 의 자 : 김인식의원외 13인

## 1. 제정이유

대전시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자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편의시설 설치검사, 사전검사 대상, 검사시기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4조 내지 제6조).
- 다. 사전검사요원의 구성, 수당, 직무, 의무 및 제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7조 내지 제10조).
- 라. 관계공무원·건축물 시설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11조 내지 제12조).
- 마. 사전검사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, 결과의 반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13조 내지 제14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
- 나. 합 의 :

## 대전광역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사전검사”라 함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(이하 “편의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관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)** ①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관련 기관 가운데 2곳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여 편의시설 자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②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대상시설의 신축, 증축, 개축, 리모델링, 리노베이션 등의 허가에 있어 허가 이전에 반드시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편의시설 설치검사)**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5조(사전검사 대상)** ①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. 다만, 국가와 정부투자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검사를 받아야하며,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별도의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.

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검사시기 및 방법)** ①이 조례에 의한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요원(이하 “검사요원” 이라 한다) 3인 이상으로 한다.

**제7조(사전검사요원의 구성)** ①이 조례에 의한 사전검사를 위하여 시설주관기관에 검사요원을 둔다.

②검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1.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
2.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
3.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편의시설 보장이 필요한 자
4.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
5.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

③위촉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8조(수당 등)** 위촉 검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검사요원의 직무)** ①검사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,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.

②검사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)** ①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②검사요원은 사전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③검사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시설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, 검사 및 확인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11조(관계공무원의 의무)** ①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,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②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 사전검사 시 이를 검사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, 사전검사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건축물 시설주의 의무)** ①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시설주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사전검사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)** ①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14조(사전검사 결과의 반영)** ①해당부서에서는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,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5조(예산의 확보)**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, 홍보,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조례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 관 련 법 령

### 【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】

- 제7조, 제15조, 제22조, 제23조

第7條 (對象施設)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대상(이하 "對象施設"이라 한다)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삭제 <2005.1.27>
2. 公園
3.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
4. 共同住宅
5. 삭제 <2005.1.27>
6. 通信施設
7. 기타 障礙人등의 편의를 위하여 便宜施設의 設置가 필요한 建物·施設 및 그 附帶施設

第15條 (적용의 緩和) ①施設主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第8條第2

項의 細部基準에 적합한 便宜施設의 設置가 곤란하거나 不合理한 경우에는 세부 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施設主管機關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便宜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.

1. 細部基準에 적합한 便宜施設의 設置가 構造的으로 곤란한 경우
2. 細部基準에 적합하게 便宜施設을 設置할 경우 安全管理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對象施設의 用途 및 周邊與件에 비추어 細部基準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

②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障礙人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**第22條 (資料提出 요구 및 檢査)** ①保健福祉部長官과 施設主管機關은 施設主에게 便宜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관련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便宜施設設置 및 設置된 便宜施設의 細部基準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は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**第23條 (是正命令등)** ①施設主管機關은 對象施設이 이 法の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施設主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法에 적합하도록 便宜施設의 設置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保健福祉部長官은 施設主管機關에게 소관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의 設置

및 개선등 是正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施設主管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## 【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】 제7조

**제7조 (적용의 완화)**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7.2.12>

1.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제1호,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
2.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

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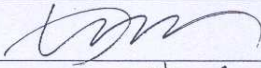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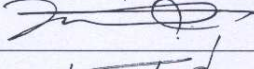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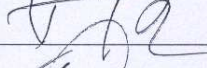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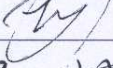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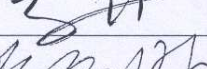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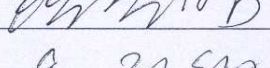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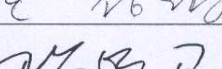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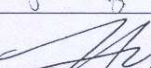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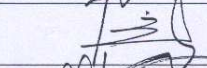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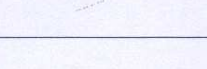
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·노인·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2.12>

## 【건축법】 제8조

**第8條 (建築許可)**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5.11.8>

대전광역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 
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

## 찬 성 의 원 서 명

의 원 명	서 명	비 고
김 인 석		
김 태 훈		
박 희 권		
이 성 희		
박 영 위		
오 영 새		
박 수 현		
오 정 영		
곽 영 고		
송 재 용		
김 명 관		
김 삼 우		
이 상 태		
권 형 려		



# 심 사 보 고 서

2007. 7. 19

교육사회위원회

## I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7. 7. 9 김인식의원외 13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07. 7. 9.

다. 상 정 일 자 :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교육사회위원회(2007. 7. 11)

상정, 질의, 심사

제6차 교육사회위원회(2007. 7. 19)

상정, 질의, 심사, 수정의결

## II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인식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도면 사전검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편의시설 설치검사, 사전검사 대상, 검사시기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4조 내지 제6조).
- 다. 사전검사요원의 구성, 수당, 직무, 의무 및 제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7조 내지 제10조).
- 라. 관계공무원과 건축물 시설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11조 내지 제12조).
- 마. 사전검사 보고서의 작성, 보고, 결과의 반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13조 내지 제14조).
- 바. 예산의 확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15조).

## Ⅲ. 검토의견 (전문위원 : 안문환)

본 제정 조례안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」이 제정된 후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, 사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성이 확대되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,

## 주요제정 내용은

- 총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제1조는 목적, 제2조는 정의
- 제3조와 제4조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 해야 하며, 2곳 이상의 편의시설자문기관의 지정,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,
- 제5조는 사전검사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,
- 제6조는 사전검사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고, 검사요원은 3인 이상으로 하도록 함.
- 제7조와 8조는 검사요원을 15인 이내로 하고, 임기는 2년,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,
- 제9조와 10조는 검사요원은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위해 현장 조사, 검사 및 확인을 하며, 검사결과를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및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,
- 제11조와 제12조는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통보, 연간 계획수립 등의 관계공무원의 의무와 사전검사 시 현장안내 및 사전검사결과 내용의 반영 후 결과보고 등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
- 제13조는 3일 이내 사전검사 결과보고서의 제출과 결과보고서 작성이 어려울 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제14조는 사전검사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·반영토록하고, 필요시 검사요원 및 관계기관·전문가 등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
- 제15조는 편의시설 설치 및 연구와 교육, 홍보, 사전검사를 위한 예산확보와 시행에 관해 규정함.

#### **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**

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장애인·노인 등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,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및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해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되나,

본 조례안의 시행과 사전검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건축허가 민원처리 시의 민원발생이나, 시행규칙 제정 시 민간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대상 건축물의 선정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이나 행정력의 낭비,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**IV. 질 의 요 지 : 생 략**

**V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**

**V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**

# 대 전광역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변 호	183
--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07. 7. 19.

제 안 자 : 교육사회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조례안 인용법명의 띄어쓰기와 사전검사요원의 구성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검사 요원의 용어를 사전검사요원으로 통일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장애인·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을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로 수정함(안 제1조 내지 제2조).
- 나. 자문기관 지정사항을 삭제하고 설계도면 사전검사자를 변경 지정함(안제3조).
- 다. 편의시설 사전검사의 근거법령을 수정함((안 제4조).
- 라.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법에서 정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으로 함(안 제5조).
- 마. 검사시기 및 방법에 관계공무원 및 사전검사 결과보고, 기간연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(안 제6조).
- 바. 사전검사요원의 구성을 정비하고 사전검사요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(안 제7조).
- 사. 수당 및 여비 지급 강제규정을 “할 수 있다”의 임의규정으로 수정(안 제8조).
- 아. 사전검사요원의 직무를 삭제하고 의무 및 제척에 관한 자구를 수정함(안 제9조).
- 자. 시설주관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(안 제11조).

## 대전광역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전광역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### 안 제1조중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을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로 하고 “적절한 검사”를 “사전 검사”로 하고

### 안 제2조중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을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로, “편의시설 및 설비(이하 “편의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관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를 “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”으로 하며

### 안 제3조중

원안 제3조를 삭제한 후 “제3조(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)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「건축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

### 안 제4조중

“설치검사”를 “설치 사전검사”로, 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「건축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”로, “공무원 및”을 삽입하고, “검사하게 할 수 있다.”를 “사전검사 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## 안 제5조중

단서규정을 삭제한다.

## 안 제6조 제1항중

“검사시기”를 “사전검사시기”로, “이 조례에 의한 사전검사는”을 “사전검사는”으로 하고

## 안 제6조 제2항중

“사전검사요원(이하 “검사요원”이라 한다)3인 이상으로 한다.”를 “관계공무원 1인과 사전검사요원 3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.”로 하며

## 안 제6조 제3항

“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”를 신설한다.

## 안 제6조 제4항

“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”를 신설하고

## 안 제7조중

원안 제7조를 삭제한 후 “제7조(사전검사요원의 구성) ①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15인 이내로 위촉한다.

1.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
2.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
3.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

②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#### 안 제8조중

“위촉 검사요원에게는”을 “사전검사요원에게는”으로 하고, “지급하여야 한다.”를 “지급할 수 있다.”로 하고

#### 안 제9조중

원안 제9조를 삭제하고, 원안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“검사요원”을 “사전검사요원”으로 하고, 제3항의 중 “경우에 그 해당시설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, 검사 및 확인에 참여할 수 없다.”를 “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.”로 하며

#### 안 제10조

“제10조(사전검사요원의 교육) 사전검사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”를 신설한다.

#### 안 제11조 제1항중

“관계공무원은”을 “시설주관기관의 장은”으로 한다.

#### 안 제11조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

제2항으로 “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”를 신설한다.

#### 안 제11조 제3항

“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,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”를 신설한다.

#### 안 제11조 제4항

“시설주관의 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, 사전검사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”를 신설한다.



원안 제13조와 제14조를 삭제하고,

원안 “제15조(예산의 확보)”를 “제13조(예산의 확보)”로 한다.

원안 “제16조”를 “제14조”로 한다.

부칙 중 “시행후”를 “시행 후”로 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	수정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<u>적절한</u>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<u>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</u>」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<u>사전검사</u>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“사전검사”라 함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(이하 “편의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관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요인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“사전검사”라 함은 「<u>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.</p>
<p><b>제3조(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)</b> ①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관련 기관 가운데 2곳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여 편의시설 자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대상시설의 신축, 증축, 개축, 리모델링, 리노베이션 등의 허가에 있어 허가 이전에 반드시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3조(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)</b> <u>시설주관기관의 장은 「건축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여야 한다.</u></p>

원안	수정안
<p><b>제4조(편의시설 설치검사)</b>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<b>제4조(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)</b>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「건축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여야 한다.</p>
<p><b>제5조(사전검사 대상)</b> ①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. 다만, 국가와 정부투자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검사를 받아야하며,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별도의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.</p>	<p><b>제5조(사전검사 대상)</b> ①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.(단서규정 삭제)</p>
<p>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	<p>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
<p><b>제6조(검사시기 및 방법)</b> ①이 조례에 의한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요원(이하 “검사요원” 이라 한다) 3인 이상으로 한다.</p>	<p><b>제6조(사전검사시기 및 방법)</b> ①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1인과 사전검사요원 3인이상이 하여야 한다.</p>
	<p>③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(원안 제13조 1항 내용)</p> <p>④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(원안 제13조 2항 내용)</p>

원	안
<p><b>제7조(사전검사요원의 구성)</b> ①이 조례에 의한 사전검사를 위하여 시설 주관기관에 검사요원을 둔다.</p> <p>②검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설주관 기관의 장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</li> <li>2.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</li> <li>3.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편의시설 보장이 필요한 자</li> <li>4.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자</li> <li>5.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</li> </ol> <p>③위촉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	<p><b>제7조(사전검사요원의 구성)</b> ①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15인 이내로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</li> <li>2.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자</li> <li>3.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</li> </ol> <p>②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
<p><b>제8조(수당 등)</b> 위촉 검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8조(수당 등)</b> 사전검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<b>제9조(검사요원의 직무)</b> ①검사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,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②검사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(삭제)</p>

원	수정안
<p><b>제10조(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)</b> ①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검사요원은 사전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③검사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시설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, 검사 및 확인에 참여할 수 없다.</p>	<p><b>제9조(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)</b> ①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③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.</p> <p><b>제10조(사전검사요원의 교육)</b> 사전검사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(원안 제9조 2항 내용)</p>
<p><b>제11조(관계공무원의 의무)</b> ①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,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</p> <p>②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 사전검사 시 이를 검사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, 사전검사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11조(시설주관기관의 장의 책무)</b> ①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,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<b>(원안 제14조 1항 내용)</b></p> <p>③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,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(원안 제14조 2항 내용)</p> <p>④시설주관의 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, 사전검사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(원안 제11조 3항 내용)</p>

원 안	수 정 안
<p><b>제12조(건축물 시설주의 의무)</b> ①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설주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12조(건축물 시설주의 의무)</b> ①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설주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
<p><b>제13조(사전검사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)</b></p> <p>①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(삭제)</p>
<p><b>제14조(사전검사 결과의 반영)</b> ①해당부서에서는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,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(삭제)</p>

원 안	수 정 안
<p><u>제15조(예산의 확보)</u>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, 홍보,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16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<u>제13조(예산의 확보)</u>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, 홍보,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14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조례 <u>시행후</u>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조례 <u>시행 후</u>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</p>